

“눈물의 해고 시작” vs “정부·여당이 부채질”

한·선진 1년6개월 유예 합의, 민주 “야합... 협상 불참”

한-민주 비정규직법 힘겨루기 심화

환노위 기습 상정 효력 공방 가열도

여야는 2일에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지 못한 채 정치적 공방에만 몰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등과 함께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시기를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하고 국회 비정규직 특위 설치를 주장하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법시행 유예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을 놓고선 효력 공방을 벌였다.

다만, 여야간 물밑 조율이 계속되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도미노 해고 사태’를 집중 부각하는 한편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법시행을 1년 6개월을 늦추는 유예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전날 한나라당 한노위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의 1년

6개월 유예안 제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정든 직장에서 쫓겨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비정규직 대란이 나있는데 민주당은 태평성대처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한노위원장에 대한 공세에도 주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비정규직 사태를 ‘추미애 실업’으로 규정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시작하자마자 것은 국민을 위한 부득이하고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조운선 대변인은 “환노위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추 위원장의 직무유기와 권한 남용에 대한 질타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전날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의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을 원천 무효로 규정하면서 정부·여당의 ‘실

업대란설’을 차단하는 한편 한나라당과 선진당 등의 합의안에 대해서도 일언지하에 거부하며 강경책을 고수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2006년 11월30일 현행 비정규직법 통과 당시 한나라당도 김형오 국회의장, 공성진 최고위원, 김성조 정책위의장 등 55명이 찬성하고 28명이 기권했다”며 “현 정권은 공기업과 정부기관을 내세워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에 앞장서며 그 책임을 야당과 노동단체에 돌리는 부도덕·몰염치·무능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전날 환노위 사태를 ‘폭거’로 규정하고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실질적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더 이상 기간 유예 논의는 없다”고 배수진을 치면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이 합의한 ‘1년6개월 유예안’에 대해 ‘수용 불가’로 맞섰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고용안전 대책 점검단을 설치, 현장점검과 실태조사 등을 벌이면서 ‘실업대란설’을 반박하는 홍보활동도 전개키로 했다. 또 다른 야당 및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부당해고 피해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야권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원총회에서 이강래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으로 천장을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권·서갑원 “박연차 돈인지 몰랐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징역 1년 구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의원 변호인은 “지난해 총선 직전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 4명의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씩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원금이 박 전 회장의 지시로 전달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같은 법정에서 뒤이어 열린 서갑원 의원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박 전 회장측에서 2006년 5월 골프장에서 현금 5천만원과 7월 뉴욕 한인식당에서 미화 2만달러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서 의원은 또 후원금 1천만원 수수와 관련 “작년 3월 두 명의 후원인에

게서 500만원씩 1천만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박 전 회장의 돈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서 의원은 6천만원과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김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일, 서 의원은 23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2일 첫 공판에서 “2억원을 받았지만 정계 은퇴 이후의 후원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다”며 공소사실 중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故 노무현 전대통령 10일 49재 후 안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골이 오는 10일 49재 행사 직후에 봉하마을 묘역에 안장된다.

‘고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9시 김해시 진영읍 봉화산 정도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49재를 지낸 뒤 그날 정오에 봉화산 사자바위 서쪽 기슭 아래에 있는 묘역에서 안장식을 엄수한다고 2일 밝혔다.

안장식은 노 전 대통령 유골이 국군의장대에 의해 안장식장으로 봉송되는 것으로 시작돼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종교의식, 유족 및 각계 대표의 헌화와 분향, 안장, 허

토, 조총발사, 묵념의 순서로 1시간 30분간 진행된다고 장의위는 설명했다.

헌화 및 분향에는 유족과 각계 대표에 이어 노 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일반시민들도 참가한다고 장의위는 소개했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쌍둥이 자녀의 돌잔치를 희망돼 저금통에 넣어둔 부부와 노 전 대통령 이 재일 중에 참석했던 장제인은 악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 등 15~16명 정도를 분향에 참가할 시민으로 선정하는 중이라고 장의위는 밝혔다. /연합뉴스

민주, 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 베퀠다

청문회-등원 문제 분리 대응... 조문정국 불씨 되살리기 기대

6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과 격렬한 대치 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이 천성관 검찰총장(13일 예정), 백운호 국세청장(8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버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개원한 6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사청문회만큼은 야당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것.

이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조문정국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각종 의혹과 함께 정부 책임론을 제기, 희미해져 가는 추모 여론을 되살려 보겠다는 것.

일단 민주당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수사 논란 및 천신일 세종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인 세무조사 로비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부분이 집중 부각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

행보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두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공격, ‘강부자’(강남부자) 정권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겠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회를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현재 교착상

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인사청문회 참여는 국회 공전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반적인 평가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한나라당으로서 는 상당히 절제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배경과 관련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대학교
Kwangju University

사회의 희망으로 큰 성장을 이루는 시기를 맞이하며, 본 대학은 다음과 같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1.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도모한다.
2. 연구의 성과를 높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다.
3.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한다.
4.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도모한다.

광주대학교는 '인성 함양, 연구 선도, 지역 선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입학처
062-271-2111

www.kwangju.ac.kr